

EAI-CISS

Northeast Asian Security Dialogue 2008

North Korea: Is It an Impeding Factor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AI-CISS 공동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2008

북한은 한중관계의 저해요인인가?

주 평 북경대학교

전재성 서울대학교

주샤오유 북경대학교

김민성 고려대학교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09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EAI-CISS 공동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전문가패널
Security Briefings Series No. 1

“북핵위기와 한중관계: 한중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토대”
주 평 북경대학교 교수

“한중관계와 북한: 발전적 3각 관계를 위하여”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본 안보브리핑은 제1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Northeast Asian Security Dialogue: NASD
전문가패널에서 발표하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전문가패널

| | |
|--------------|---|
| WANG Yingfan | Former Vice Minister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RC |
| MA Mingqiang | Director of Office of Korean Peninsula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RC |
| JIN Xide | Deputy Director of Institute of Japan Studies, CASS |
| JIA Qingguo | Deputy Dean of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KU |
| ZHU Feng | Deputy Director of CISS, PKU |
| FAN Xuecheng | Department of Policy Plann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PRC |
| 정 종 욱 | 전 주중대사 |
| 민 선 식 | YBM 사장 |
| 오 승 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하 영 선 | 서울대학교 교수 |
| 전 재 성 | 서울대학교 교수 |
| 김 병 국 | 고려대학교 교수 |
| 서 상 민 | EAI |

북핵위기와 한중관계: 한중협력은 한반도 평화의 토대

주평 朱鋒
북경대학교 교수

서론

2009년 2월 이래, 북한은 제2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 6자회담 불참 선언, 1953년 정전협정 종결 선언 등 일련의 도발적 행위를 벌이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면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를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도전적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적 수단과 외교적 노력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조치였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지역안보 노력이 결국 와해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안보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6자회담의 노력 이후에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안보의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한 핵 문제가 점진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도 ‘북한문제’가 뚜렷한 변화와 융통성을 갖지 못한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기본적 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제도적 차원의 안보협력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보를 확고히 지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지역에 이해를 가진 강대국들과의 관계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요한 요소이다.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와 주요 강대국 간



의 관계라는 ‘안보구조’를 무시한다면, 결코 다른 국가들의 안보 요구를 포용할 수도 지역의 안보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구조는 새로운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구성원들은 이익의 충돌을 겪고 있으며 강대국이 원하는 안보 질서 수용을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전형적인 국가가 바로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 두 곳이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냉전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위기를 조성하면서 끊임없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되었으며 나아가 세계적인 불안정 요소를 잉태하게 되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의 참전국이면서 6자회담의 창도자(唱導者)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빼놓고는 북한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

한편으로,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이자 에너지의 주요 공급 국가이기도 하다. 2008년, 중국과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양국의 무역량은 북한의 대외무역 총계의 73%를 차지했다. 북한은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한국은 1992년 국교 수립 이래 지속적인 관계 발전과 우호 증대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양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일보하게 되었다. 이렇듯, 한반도 문제와 중국은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북한의 핵포기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중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먼저 중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발전 과정 중 북한의 요인에 대해 회고하고, 북핵문제의 핵심 요인과 중국의 핵심 이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작금의 북핵 위기 속에서 미래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한중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요소

1992년 국교수립 이래, 한중관계는 다방면에 걸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양국은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한류’와 ‘한풍’^{漢風}은 이미 중국인들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다. 또한 다소 빈약했던 양국의 정치관계도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으로 한 단계 격상하기에 이르렀다. 한중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양국관계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면, 한결같이 지속되어 온 어두운 그림



자가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또한 한중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 및 전략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중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가 특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던 것이다.

1983년, 북경은 제11회 아시안게임 유치를 신청하였다. 만약 북경의 아시안게임 유치가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 아시안게임 이사회의 모든 멤버들이 북경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에 김일성은 마지못해서라도 중국의 선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1991년, 중국은 한국의 UN 가입을 묵인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을 끊임없이 설득하였다. 이 또한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경은 당시 미국이 제안한 ‘교차승인모형’ — 중국과 한국의 국교수립, 미국과 북한의 국교수립 — 에 찬성하였으나, 이는 곧 북한의 반대에 부딪혔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일련의 교류와 준비를 거친 끝에 정식으로 외교관계 수립을 선언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중국에 대해 “중국이 이미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렇게 하시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고수하며, 설령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것이오.”라고 응수했다. 이 때 형제의 관계로 묘사되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경험하면서 금이 갔을 지도 모른다. 설령 훗날 중국이 북한에게 여전히 식량과 원유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말이다.

중국과 한국의 국교수립과 양국의 순조로운 관계 발전은 중국의 국가이익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중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배반으로 여기며 중국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전 세계와도 멀어져 갔다. 중국은 보다 개방적이며 강대해졌지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한층 더 보수적이고 빈곤해져 갔다. 이 같은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의심할 것도 없이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의 교착상태이다. 냉전의 종결 후 근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평양은 여전히 냉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발전은 냉전 후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까닭에 이미 변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바로 폐쇄적인 심리상태에서 근거한다. 중국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와 지속적인 교류의 증가에 북한은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북한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과 폐쇄적 반응으로 일관하였다. 중국과의 신뢰가 깨어졌다고 판단함에 따라, 북한은 증오와 심지어 배반을 당했다는 기분을 갖게 된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핵심요인

북핵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불안감에서 야기되었다. 북한의 불안감은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라기보다는 김정일 정부, 즉 김씨 정권 존망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김정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도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제 2차 핵실험에 잠재하고 있는 동기를 짐작해 보건대, 그 타이밍이야말로 김정일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먼저,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지 앞으로의 협상카드로만 생각했다면, 이는 몹시 모자란 생각이라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국가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이러한 강력한 행위는 단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권력상승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며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북한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원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앞으로도 되풀이해서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통해 위기를 초래한다면 이 지역의 안보상황과 북핵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이미 간단히 협상의 열쇠를 획득하려는 문제가 아닐 것이며, 이는 곧 북한이 절대 6자회담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6자회담 고유의 구조를 철저히 타파하는 것이며, 전세계에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있다. 이를테면, 만약 북한이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6자회담의 다자적 제제보다도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리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목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정부의 입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은 절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도발적 행위의 이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도발행위들은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대외적 압박이나 도발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된 기본 기술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기까지, 장소 확정에서 새로운 핵시설 등 일련의 준비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최소한 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북한이 작년 연말부터 이미 2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진행시켜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북한이 이미 지난해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전부터 새로운 전



략적 선택을 통해 2009년을 시점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미사일 실험 발사와 이후의 강경한 대처와 행동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되짚어 볼 때, 모든 것이 북한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하여 의장성명을 통과시켰으며, 4월 14일 북한은 6자회담의 탈퇴를 선언하고 5월 25일 2차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렇듯 북한의 모든 행보는 명확하게 계산되고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사전계획 하에 이루어진 북한의 새로운 결정, 즉 6자회담을 철저히 부정하고 전세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북한 대외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 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왜 이 시기에 ‘사전모의’를 통해 도발행위를 감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원인은, 김정일의 시급한 국내 권력교체와 새로운 국제 권력구조에 대한 구상이다. 김정일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권력배분을 가속화하고자 했으며, 대외적으로 강경한 핵개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로써 미래의 북한 지도자에게 소위 김정일의 유산을 남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안전이 아닌 정권안전이다. 때문에 핵무기는 북한 권력교체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핵실험에서부터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까지 일련의 ‘돌발적’ 행동들은 사실상 임기응변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긴장된 대외관계를 통하여 북한 정권의 통제능력을 한층 강화시킨 다음 위기형세를 이용하여 김정일이 원하는 권력구조로 재편성하고 적합한 가족구성원을 선택하여 권력승계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두번째 원인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수립 후 외교정책 조정 과정에서 김정일은 강경책을 구사함으로써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이후 국가 안보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외 군사 이슈를 추가하기보다는 아프간 등과 같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더 복잡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를 실행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또한 북한이 어떠한 외부 요인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군사위기를 조장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북핵문제와 중국의 국가이익

지역안보에 대한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국가이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중국은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작금의 위기 사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핵문제의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핵문제를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자.

우선, 북핵문제는 일종의 핵확산 및 반확산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70년대부터 형성된 국제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 제도와 냉전 후 한층 강화되고 발전된 국제 핵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제 반확산 정책은 5개의 핵무기 보유국만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제도가 설정한 일종의 ‘게임의 법칙’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평등 혹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평양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더욱이 북한의 안전을 위한 핵무기 개발이 합법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도 해결될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은 국제 핵 비확산 제도에 대한 유린이며 지역과 전세계의 안정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 사회의 현실 생활에서 ‘절대적 공평함’이란 존재하는가? 만약 현실생활 속에서 공평한 법규가 존 롤스(John Rawls)가 말한 규칙 하의 공평이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간단히 국제관계에 절대적 공평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국제제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보호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국제 공공이익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중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이다. 이는 북핵문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북핵문제는 일종의 지역 안보문제이다. 냉전 후 동아시아 지역안보는 줄곧 변화와 조정의 과정 중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안정을 겪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안보의 틀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왔다. 이렇듯 동아시아 지역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건설적인 협력과 상호개방이 있었다. 북한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탈냉전기 동아시아 지역 안전의 틀을 깨려는 행동이다. 북한의 돌발적 행위로 인해 한반도는 냉전의 잔해가 해소되기 힘들 뿐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이슈들이 해소되지 못할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의 장기적 지속이 지역의 핵확산 가능성을 한층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만약 북한의 핵 보유 과정은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이라는 점이다. 이로써 핵 군비경쟁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 걸쳐 재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이자 바람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 및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일본과 한국이 모두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우려하고 있을 때 중국이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중국이 다른 국가가 직면한 안보 위협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다면 중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웃 국가들과 얽혀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지금 책임감 있는 대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대국이라면 다른 나라의 국민과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만약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다른 국가에게 ‘안전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다면,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는 확립되기 힘들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대국으로서의 지위와 기상은 스스로가 평가하는 ‘자아감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지각이다.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역 내에서 핵 보유국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가장 핵심적 국가이익이다.

셋째로, 북핵문제는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국가안보에의 도전이다. 중국정부와 국민은 이제껏 북한과의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생각해 왔다. 그러나 국제관계도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마찬가지로, 우의는 ‘밥을 대신 먹는 것’이 아니다. 우의는 잘못된 행위를 용인하고 원칙 없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복잡한 지정학적 정치이익 및 지역안보와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역사, 전통적 우의, 경제적 상호이익, 안전 등 다방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줄곧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평행정책을 표방해 왔던 이유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6자회담 탈퇴, 2차 핵실험 감행 및 1953년의 정전협정 포기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중국은 북한이 북중우의를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북중우의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상대적으로 성숙한 핵 능력을 보유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완전히 비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위협’으로 인하여 6자회담이 무력화되고 동아시아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가 계속되는 한 이 지역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중국의 결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중국 안보이익의 핵심적 요



구사항이다. 북핵은 중국의 안보에 관한 핵심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3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면서 국제사회에 융합해 갔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넷째로, 북핵문제의 본질은 ‘북한문제’이며, ‘북한문제’의 핵심은 바로 평양 정권이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평화와 협력과 번영의 열망을 무시하고 적대적 정책으로 지속함으로써 ‘정권안전’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어떠한 정치체도를 시행하고 발전시키든 북한의 당과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기존 정치체도의 생존을 위해 주변국가와 지역이 추구하는 협력과 개방과 번영의 기본적 요구를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적대적 도발 정책으로 북한의 특수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합법성과 안전을 추구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평양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급격한 위기태세의 조치가 재차 증명하듯,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북핵위기와 한중관계

진정 ‘북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찌되었든 한반도의 두 국가—한국과 북한에 의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한반도의 주인이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해 밀접한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가진 이웃 대국인 중국 역시 한반도의 안정과 협력, 나아가 통일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북한의 핵무기 포기과 국제사회로의 귀속은 한반도 안정,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필수적이다. 북한은 한중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한반도의 안전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점진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안보와 평화의 안정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문제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북핵위기라는 난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한중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먼저,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공통의 이익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그리고 안정의 유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일 한중 양국이 이미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 우호적 관계를 이룩했다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양자관계의 격상을 꾀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중



모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두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형세가 통제력을 잃고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위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공조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한국과 중국이다. 게다가 만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난민 발생 등의 피해 역시 한중 양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 현재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맞서 한중 양국은 고위층 간의 정치협상을 강화하고, 앞으로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위기와 한반도 군사충돌의 상황을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안보협력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대한 근심거리임에 틀림없다. 또한 북핵문제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 내 국가간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외부로부터 그들의 정권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지역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다자안보체제는 북한의 핵 포기 이후 정권 안정에 관해 외부의 불간섭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될 수 있다. 만약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각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지역 내 국가간 협력의 모범이 되어 전지역의 협력문화와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관행을 형성하고, 동아시아지역 안보협력체제의 수립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지역안보와 나아가 전세계적으로도 안보 이슈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후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중대한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존재는 '삼위일체'의 동북아 안보체제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은 6자회담의 기타 회원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의 각국이 단결성과 근엄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원활한 교류, 상호 협조, 공통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진행하는 핵실험은 6자회담에 가입한 6년 간의 승인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 핵확산체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가져왔다. 설령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해서 6자회담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변할 일은 없을 것이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공통된 의지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 도발을 억제하려는 다자주의의 틀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앞으로 있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조치는 분명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 핵포기를 승인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기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 논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나타날 새로운 핵확산을 방지 할 수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핵 비확산이라는 그림자가 이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은 동아시아 안보가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
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동아시아
에 새로운 핵확산 조류가 시작된다면, 국제안보환경에서 중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
게될 것이고 지역외교와 정치국면에서 중국의 위치 또한 매우 불리해질 것이다.
2009년 6월 12일 유엔에서 통과된 1874호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
조치를 대변하는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생동적으로 체현한 것이
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1874호 결의안의 실행을 촉진하여 북한에게 도발에 대한 대
가를 치르도록 할 용의가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위한 노력과 동북아 전체의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약 북한의 핵 보유 과정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정
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했던 두 번 했던, 아니면 세 번을 했
던지 간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
은 ‘북한문제’이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미 증명하듯, ‘북한문
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면 ‘북핵문제’ 또한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문제’
의 핵심은 평양 정권이 중국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안정과 협력과 번영의 공통이익
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동아시아 각국이 ‘강제외교’強制外交
를 사용함으로써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결론

‘북핵문제’와 그 배후의 ‘북한문제’는 이미 지역안보와 세계평화를 해치는 매우 불안
정한 요소가 되었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 이후의 개방, 발전과 진보의 역사
에 순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경직된 독재적인 ‘선군체제’와 지도자 숭배를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원인이다. 2009년 상반기 내내 북한
은 2차 핵실험 등 거의 미친 듯한 일련의 도발행위를 자행했고 북핵문제의 결정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6자회담의 성과를 뒤엎으려는 평양의 시도와 필사적인 핵무기
보유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원래 6자회담을 통해 ‘이익협
조, 공동행동, 상호타협’의 회담과정에 따라 발전되어 온 외교적 해결의 길은 이미



‘막다른 길’이 되어버렸다.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1874호 결의안은 유엔이 강제적 제재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의 간섭을 행한 실례이다. 또한 한반도 핵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법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 정부가 여전히 실행하고 있는 ‘대항정책’의 수위를 낮추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어쩔 수 없이 제재, 고립, 강제적 핵 감시, 금융제재 등의 수단으로 북한에게 징벌과 강압을 가할 수밖에 없다.

북핵위기의 급격한 악화는 중국외교의 중대한 도전이다. 중국은 스스로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공통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국과는 더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계기를 통하여 양국관계를 격상시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비록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국가이익이 모든 방면에서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북핵위기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제에서는 고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중 양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세계와 북한을 잇는 다리가 되어 지역 안보협력체제의 발전에 힘쓰며 북한정권의 불안감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북핵문제와 북한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고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국민과 세계 인류의 공동이익을 도외시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것을 간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양국은 반드시 공동의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

한중관계와 북한: 발전적 3각 관계를 위하여

전 재 성
서울대학교

서론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한중관계는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양국은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양적 관계 발전은 물론, 작년 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비약적인 질적 발전 또한 도모해 왔다. 중국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지구적으로 “책임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기초로 “지구적 중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다. 책임있는 강대국인 중국과 지구적 중진국 한국의 국가전략 간에는 많은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국제정치가 세력과 이익의 균형을 넘어 상호 협력적인 다자주의적 협력의 기초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전통적 안보는 물론, 인간안보의 영역에서도 안전하고 번영하는 동북아 지역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수교함을 넘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은 물론, 북한의 미래를 향한 국제적 대북원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 역시 평화적 경제발전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독려하고, 지역에 안보적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주변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점차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공산주의권의 몰락 이후, 강성대국 노선을 견지하며 군 중심의 경제, 사회 발전 노선을 택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주변국에 안보적 위협을 가함으로써 미국 등과 수교 및 평화협상을 벌이고,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중에 북한의 경제는 점차 몰락해가고 있으며, 민심의 이반도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약화됨에 따라 북한의 정권 이양이 불가피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 이후의 북한 정치지도부가 어떠한 국가전략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점은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지구의 중



요한 관심사이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남·북·중 3각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더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안전보장에 양국이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기본 전략, 북핵, 한반도 평화구조 및 향후 통일에 관해 양국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전략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전략 및 외교전략의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동북아의 상대적 약소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지구적 중진국이자 동북아의 협력촉진자의 지위와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역시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 하에 고통 받았던 반식민지의 역사를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한 개발도상국의 국가전략을 넘어, 이제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 지구적으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고 있다.

21세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권력장 속에서 과연 한국과 중국이 중진국,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목적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중요한 관심사이자, 양국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21세기는 과거와는 달리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대조류 속에서 군사, 경제력 중심의 발전만으로는 진정한 국력강화가 어렵고, 이념, 제도, 문화 등 소위 연성권력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 하며, 상대국의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제제도 등 거버넌스적 전방위 외교를 펴야 하는 새로운 시대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 행정부는 지구적 중진국이라는 외교전략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소위 ‘글로벌코리아’ Global Korea라는 정책표어는 이러한 목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중진국 외교는 그 목표와 범위, 정책 수단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우선 중진국이라는 범주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적극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소극적 개념인 경우가 많다. 한국 역시 동북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지만, 지구적으로는 10위권의 국가라는 평가 하에 중진국의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진국으로서 어떠한 외교전략과 목표, 그리고 정책수단을 소유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한국이 명확한 지구적 차원의 중진국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각 분야별로 조율되지 못한 정책들이 공존하거나, 혹은 지구적 패권국인 미국과의 동맹 전략 하에 미국의 파트너로서 참가하는데 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대 강대국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는 전략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어 이중적 전략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역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여야만 한·미·중 삼중의 전략협력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중은 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전략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지구적 경제위기, 테러로 인한 안보위기, 그리고 정당성의 위기 등 3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은 패권 재조정기에 들어 중국 및 여타 강대국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지만, 향후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전략적 관계 설정은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의 복합적 현상을, 다자적 안보협력 혹은 지역통합으로 발전시키는데 궁극적 목적을 둘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가들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긴밀한 경제관계에 기반한 지역통합이 가속화되어야 하고, 경제마찰을 순조롭게 다루어 갈 수 있는 기제들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 정체성의 정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핵과 북한의 미래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동북아 다자협력 구도에 순조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동시에, 북핵위기 해결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며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점차 더 강한 군사력과 연성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책임있는 강대국, 혹은 책임있는 이해상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힘과 외교적 역할을 안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철학에 입각한 강대국 외교를 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를 비판하는 비판자의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질서 및 세계질서를 창출해 가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교관과 세계관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외교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변국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 질서의 문제점을 적절히 비판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이러한 세계관이 주변국들의 찬성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김태호 외 2008).

동북아의 상황에서 중국의 주변국 외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력균형의 원리가 현존하며, 다자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대국이 주도하는 다자협력과 지역통합은 지역의 정치외교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별사안들을 다룰 때 자국의 이익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주변국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위기는 중국의 외교전략의 노정에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일정 수준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지역이익의 담지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이 북핵위기와 북한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이자 주요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중재자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해 왔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및 외교 의존도와 중국의 외



교전락을 고려해 볼 때, 북한문제의 전개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북핵위기를 넘어서 북한문제 전반, 한반도 평화구조와 향후 한반도 거버넌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의 이익 조정과정에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기대 역할에 대한 수많은 요구를 받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의 외교방향은 중국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강대국 외교에 어떠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중진국 지향, 강대국 지향의 외교대전략은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으며, 양국의 외교전략은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조화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동북아의 다자협력적 질서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북핵과 북한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어가는 것은 양국의 이익은 물론, 지역 질서의 근본적 변환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한중관계와 북핵

1993년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이래, 16년의 시간이 흘렀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수령옹위체제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핵을 선택했다. 핵은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특기할 점은 중국이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1차 북핵위기가 북미 간의 양자회담으로 일단락 지어지는데 반해, 2차 북핵위기는 북·미·중 3자 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통해 전개되어 나갔다. 북핵문제가 동북아 다자안보의 협력 틀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중국이 회담을 주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국은 경제력 강화에 이은 정치외교적 영향력 강화를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고, 이 가운데 북핵위기에 대처하는 중국의 외교적 역할은 향후 중국의 외교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시금석과 같은 계기이다.

중국은 냉전기 북중의 협력관계 및 북중 양자 동맹관계, 그리고 탈냉전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지원 등에 기반한 밀접한 북중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맹국이자,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상대국이기도 하다. 북중 동맹관계 속에는 안보협력, 정치외교적 협력, 경제적 협력의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가운데, 모든 동맹에서 나타나는 동맹유지의 딜레마 또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적, 정치외교적으로 발전하고, 북한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북중관계는 점차 비대칭적 동맹의 성격을 더해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정치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안보-자율성의 교환 딜레마(security-political autonomy tradeoff)에 처하기도 한다. 북·미·중 3자회담은 물론, 이후의 6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이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것은, 이러한 안보-자율성의 교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불어 중국이 지역적 리더십은 물론 전 지구적 목소리를 높여감에 따라,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중국의 외교방향에 연루되는 문제도 낳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는 물론, 한국과의 관계 역시 최대한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노선에 북한이 반드시 찬동하지 않는 가운데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외교노선에 연루되는 딜레마를 안게 된다.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상, 북한은 중국이 원하는 외교노선을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과 10월, 미사일 및 핵실험 이후 중국이 UN에서 대북 제재안에 찬성하고 이후 실질적 제재정책에 참여한 것은, 북한이 중국의 외교노선에 찬동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북중 동맹관계가 얼마든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북중 간의 연루entrapment-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핵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중 동맹관계는 다양한 변이를 겪게 되고 그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국가전략을 고려하면서도 북중 동맹관계 및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정책공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이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 및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 주변의 안보적 안정 상황 유지,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불식 등의 정책이다. 북핵문제는 미국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금석이자,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안보사안이다. 또한 중국이 냉전의 동맹국인 북한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보, 특히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규범을 준수하면서 안정적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은 동맹국 북한의 문제를 양자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주변국과의 다자적 협력과 국제제도적 규범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위기를 다루는 외교의 본질은 다자회담의 개최를 보장하는 주최국의 역할, 즉 회합촉진외교convening diplomacy, 다자들의 협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참가자들의 대화를 촉진하는 협력촉진외교facilitating diplomacy, 때로는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대화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외교manipulating diplomacy,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규범과 국제연합의 원칙을 강조하는 규범외교normative diplomacy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이 중국의 국가전략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위 “책임있는 강대국” 혹은 미국의 표현대로 “책임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의 역할을 통해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 외교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핵위기의 앞길은 순탄치 않다. 그러나 북핵위기로 한중관계는 물론,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의 협력은 다양한 형태에서 강화되어 왔다. 첫째, 동북아 국제정치는 전형적인 세력균형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6자회담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규범에 입각한 규범의 정치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둘째,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관련 당사국들끼리 해결하는 양자적 혹은 삼자적 협상방식에서 벗어나 다자적으로 지속적 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협력의 문화를 창출하게 되었다. 셋째, 6자회담의 과정에서 다양한 양자, 삼자, 혹은 사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다자관계



를 뒷받침하는 소다자주의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핵위기가 동북아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안보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단순한 무기개발, 혹은 안보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서, 향후의 한중 협력, 혹은 주변국의 협력은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향후 북한이 동북아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며 생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비단 북핵문제의 해결, 핵 없는 북한만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하는데 그칠 수 없다. 북한은 북한 정권의 체제에 대한 미래 보장이 없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한중 간의 전략적 논의와 협력이 없이는 북핵을 포기하도록 못할 것이다. 현재 6자회담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와 북핵에 관한 논의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북한문제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전략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였다. 주로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지만 외교안보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측면에서 외교안보 이슈, 특히 북한문제를 다루어 나가려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향후 겪을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한 경우의 수를 명확히 예측해 보고, 이를 한중은 물론 주변국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 및 기초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및 사망, 경제 악화로 인한 주민의 반발 및 폭동, 내부 쿠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다양한 급변사태의 경우가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권력 승계와 경제상황의 변화는 급변사태라기 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상황이다. 주변국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면, 급변사태에 각자의 국익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북 문제에 개입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주변국이 개입이 발생한다면, 국제연합의 개입, 북중동맹에 근거한 중국의 개입,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과 미국의 개입 등이 있을 수 있다(소치영 2001 참조).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 내 각 세력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사태 등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이 향후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소위 개념계획 5029를 수립하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본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 문제는 주변국 모두의 참여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국제적 문제로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기본적, 전략적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북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미래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 논의로서 향후 한반도의 상황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가 이상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해결될 경우, 북한의 정상화 및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의 국제적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정상화 과정에 주변국



과 국제기구가 어떠한 형태로 도움을 주는가에 따라 북한의 미래 향방은 물론 주변국들 간의 관계도 결정될 것이다. 북한이 어느 한편의 과도한 도움을 받아 정치외교적으로 경사된다면 이 역시 북한의 미래는 물론 주변국들 간의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동북아의 정상국가로, 그리고 주변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갖는 국가로 변화하도록 주변국들은 국제적인 대북 원조레짐을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사실상 향후 북한의 정상화 과정에 물질적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주요 세력으로서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북한의 순조로운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핵문제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반면 이 과정에서 한중 간의 협력은 물론 주변국들 간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북핵문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북한 양자의 입장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로서,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북한을 매개로 한 삼자 관계 속에서 더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의 협력은 그 자체로 북핵 폐기라는 성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북핵문제 자체가 북한의 미래와 연결된 정치적 문제이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미래, 급변사태, 정상화 과정에 관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북한의 변화과정을 관리함과 동시에 한중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동북아의 주요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행위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될 것이다.

남·북·중 삼각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조 및 통일

한반도 평화구조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도 절실히 원하는 바이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이어, 정전구조를 평화구조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주변환경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북한 역시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재성 2006).

문제는 각 국가들이 상정하는 지속적인 평화의 조건이 과연 같은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축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매개로 한 양측의 시민사회가 단단히 결속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교류협력이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장되고, 정치군사적 타협과 교류



가 이루어질 때,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제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국제적인 시장 규범, 보편적인 인권 규범 등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이며, 국제제도가 매개하는 복합적 상호의존이 평화의 뒷받침이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한국의 체제적 조건을 받아들일 때, 정권과 체제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와 수령 중심의 정치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자본주의적 착취에 기반한 제국주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상정하는 평화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의 평화공세는 사실 남북의 공존화 평화, 화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주축이 되는 통일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강한 것이었다. 평화가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진정한 평화구조가 달성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지향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체제와 가치관이 상이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한중 간, 미중 간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개발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평화와 같이 국가레짐의 성격의 동질성을 상정하지 않고, 시장을 매개로 한 상호의존을 추구하더라도 시장의 운용방식을 의도적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국제레짐 속에서 평화의 조건을 타협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에 많은 함의를 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평화구조를 정립해 나감에 있어 서로 간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양자적 평화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조약상의 장치만이 아니다. 그간 논의되어 왔던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형식문제를 떠나 국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체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그간 한국과 중국, 여타 주변국과 중국이 도모해 온 평화의 메커니즘이 북한과의 평화구조를 이루는 국제적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한반도는 분단 이래 통일에 관한 많은 담론을 생산해 왔다. 남과 북은 각기 자신의 체제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산하며 지속적인 통일방안 공세를 펴왔다. 그러나 통일이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합의에 의한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냉전의 종식 이후, 남과 북은 1991년 기본합의서를 채택하



고 향후 한반도 거버넌스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등 진전의 기미를 보였으나, 통일의 진정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공동성명은 통일에 관한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이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왔을 뿐 통일에 관한 철학, 이념, 현실적 세부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통일 논의는 공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핵위기를 둘러싼 사태 전개 속에서 통일논의가 일정 부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북한은 개혁, 개방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협력이 심화되면 미래에 통일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적 협력이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정치적 통일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의 핵외교가 지속되고 긴장이 조성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다가 북한 내 유사사태 이후 예기치 못한 통일의 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연 관리된 방식으로 통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민족은 역사를 통해 하나의 민족국가로 존재해 왔으므로, 통일은 당연한 민족의 목표이다. 그러나 자국 체제 중심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존속에 위협을 가하므로 통일의 장기적 목표가 단중기적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통일 논의가 협력 가능성을 어렵게 할 때 통일에 관한 명시적 논의보다는 평화적 공존에 관한 현실적 방안을 토의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논지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통일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문제이다. 통일한국의 국력 크기, 외교 전략의 방향, 국가전략의 방향 등에 관한 국제적 신뢰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며 통일한국이 양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신뢰를 줄 때에만 사실상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가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중국은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과도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복합적 지위에 있다. 따라서 통일이 당사자들의 의도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외에는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통일한국이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위해 요소가 되지 않으며 중미관계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현상유지보다 통일한국을 선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상황 변화와 통일 논의가 남·북·중 삼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가능하다면 북한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의 당위성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일방적 논의보다는 미래 한반도의 질서와 거버넌스에 관한 전략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남북 중 삼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한국과 중국은 변화하는 세계 및 지역 질서 속에서 각기 새로운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의 이익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반도와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중요하며 또 많은 분야에서 가능하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일으키는 불안정의 요소는 여전히 한중관계와 6자회담, 더 나아가 지구적 비확산 노력에 많은 어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요소는 위기임에 틀림없지만, 한중 간의 협력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 요소가 동아시아 정치에서 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문제, 더 나아가 북한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적대적 국제환경 속에서 수령체제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정권안보와 체제안보의 이중적 안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된 정책 수단 속에서 선군주의와 핵을 내외부의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방책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함에 있어 비확산이라는 제한된 목적만을 추구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북한 스스로도 핵을 포기함으로써 정권과 체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주변국의 청사진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청사진 속에는 북한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는 보장책, 공평한 한반도 평화구조, 북한의 미래를 지원하는 국제적 대북레짐과 외교관계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적 거버넌스에 대한 그림이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게 절박한 문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구적 중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에게 북한의 존재는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도 북한은 여전히 다루기 힘든 존재이자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 역시 장기적인 북한의 미래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 특히 한국,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유용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협력과 신뢰의 문화를 창출하고 협력을 제도화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 다자협력의 제도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세력균형의 지역구도를 다자협력의 구도로 변환시키는 것이 향후 한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전략적 협력의 방향일 것이다. ■



참고문헌

김태호 외. 2008. 《중국외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 서울: 나남.

소치형. 2001.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개입유형”. 〈중국연구〉 제20집.

전재성. 2006.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22집 1호.

EAI-CISS 공동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학생포럼

Student Working Paper Series No. 1

“강대국 조정: 동아시아 지역 안전 협력의 초석”
주샤오유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석사과정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북한문제”
김민성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본 워킹페이퍼는 제1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Northeast Asian Security Dialogue: NASD) 학생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학생포럼

지도교수

ZHU Feng Deputy Director of CISS, PKU
전 재 성 서울대학교 교수

학생대표

LI Jun Ph.D. Candidate of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WANG Yisheng Ph.D Candidate of Chines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DU Binwei Ph.D Candidate of HuaZhong Normal University
Zhu Xiaoyu. MA Student of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김 민 성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김 성 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이 정 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

강대국 조정: 동아시아 지역 안전 협력의 초석

주샤오유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석사과정

개요

동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대국들은 진부한 현실주의 개념을 신형 자유주의 개념과 결합할 수 있을까?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효과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관한 토론을 위해 본 논문은 먼저 협력안보와 안보협력 및 강대국 조정과 관련한 개념을 다룰 것이며, 이론, 역사, 현실 세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대한 강대국 조정의 의의를 분석하려 한다. 강대국 조정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초석이라는 관점과 함께 6자회담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안보협력의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볼 때, 강대국 협정이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겠다.

핵심어: 동아시아 안보, 협력안보, 안보협력, 강대국 협약(concert), 6자회담

서론

오늘날 국제관계 연구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종결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았으나 동아시아 지역은 약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해 왔다. 예컨대, 대만해협 위기, 북핵 위기 등과 같은 안보의 긴장 상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이고 제도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은 여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강대국이 밀집해 있고 경제도 발달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복잡한 국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시스템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 안보협력 시스템의 부재는 지역 내 장기간 존재해 온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분쟁과 한반도의 핵무기 및 대만해협의 대치상태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조정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해왔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오발의 가능성을 가중시켜 지역 안보를 위협해 왔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지역 안보의 불안정은 지역의 일체화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지역 내 경제협력과 발전 그리고 각국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미국, 한반도가 이미 전 세계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지역 안보문제의 위기는 전 세계 안보의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일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 위기와 함께 지역적 안보 위기 또한 전지구적인 파급력을 갖는 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안보문제는 단순한 지역 통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安德魯 외 2005; 見朱鋒 2005).

국제관계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안보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강대국과 관련된 명제들을 총 망라한다. ‘대국굴기’에서 ‘권력이양’으로, ‘영토분쟁’에서 ‘역사문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맹렬한 기세’에서 ‘국내제도로의 전환’, ‘자원경쟁’에서 ‘해상안전’으로, ‘문화의 다원화 및 역사적인 배경’에서 ‘민족 고유의 개성’으로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서는 상이한 국제관계이론의 사례와 견해가 존재한다(朱鋒 2007a).

현실주의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지닌 학자들은 지역정치, 이익충돌, 역사문제, 민족정서 등의 요소가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강대국의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유럽의 어제가 아시아의 오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공격적인 현실주의자로 대표되는 미어샤이어 John J. Mearsheiner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발전할수록 강력한 군사기구를 확립하거나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Friedberg 1993/94, 7). 따라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충돌하게 될 것이며 ‘대국정치의 비극’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낙관적인 현실주의자들은 비록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상승이 미국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치명적이거나 실질적이지 않다고 본다(約翰·米兒斯海默 2008, 420). 오히려 미국의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략관계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안정된 ‘양극관계’가 성립되어 미국과 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Shambaugh 2006).

자유 제도주의자들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Ross 1999, 117). 그들은 동아시아 지역이 냉전시대 종결 이후의 과정에서 가장 큰 이점을 획득한 지역의 하나라고 본다. 경제영역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국



가 간 경쟁으로 인해 한 나라가 지불해야 할 대가 역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지역주의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안보협력의 기능에 ‘과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안보영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동아시아 안보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朱鋒 2007a, 140).

구성주의 관점을 지니는 학자들은 승인 및 규범의 요소로 부터 출발하여 동아시아 안보의 출로를 탐색한다. 미국의 데이비드 칸David C. Kang은 아시아 국가의 역사적인 특수성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국가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던 위계질서hierarchy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위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의 아미타브 아차리아Amitav Acharya는 칸의 견해에 반대한다. 아차리아에 따르면, 아시아는 과거의 위계질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고 아시아의 앞날에 불안정한 요소는 지역의 규범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Kang 2003a, 57-85; 2003b,).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국가들의 상호의존과 제도상의 연계, 특히 동맹 내부에서 유사한 규범을 형성하는 ‘공동문화’——중국이 90년대 이래로 중시해 왔던 협력 규범의 개입 및 발전과 동맹국가 간의 관계——와 같은 협력은 중국이 동아시아 공동문화에 대해 중요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Acharya 2001; Goh & Acharya 2005).

주펑朱鋒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동아시아 안보는 신현실주의 이론, 자유제도주의 및 구성주의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사례에서 출발하여 제기된 이론과 기본적인 결론은 모두 단지 하나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문제들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해 확실한 이론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안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론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오히려 상반된 이론들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전방위적 다각도의 관점으로 고려해야 한다(朱鋒 2007a, 144).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연관된 이론을 통해 해결해야 적합하다.

바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이 자유제도주의가 제창하는 다변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형성 과정 중 현실주의의 강대국 협약은 오히려 안보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협력안보와 안보협력 및 강대국 협약과 관련한 개념을 소개한 후, 이론과 역사 그리고 현실의 세 가지 각도에서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의의와 관련된 강대국 협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6자 회담을 예시로 지역 안보협력 확립을 위해 강대국 협약이 맡은 역할을 고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위한 강대국 협약이 적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협력안보와 안보협력

동아시아에서 안보 개념은 진보와 발전의 과정에 있으며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종합안보 등으로 표현된다(Kuisong 2004, 145-151). 이러한 안보개념의 발생과 진보, 발전은 복잡하고도 독특한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반영하여 다른 지역에 이미 존재해 온 경험을 직접적으로 답습할 수 없게 하였다.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계와 학계는 성실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새로운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안보협력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Kuisong 2004, Introduction).

이러한 가운데,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개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원칙들이 대화를 통한 지역안보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협력안보는 1990년 9월 캐나다의 외무부 장관이 연합국 회의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1993년 호주 외무부 장관이 이 개념에 대해 비교적 명쾌한 논리를 펼쳤는데, 그는 안보문제에 대해 상호간 협의가 필요하며 적대적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도발하여 무력으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상호 간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다변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화의 습관’habit of dialogue을 강조했다. 간단히 말해, 협력안보는 바로 협력을 통해 안보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이다(Evans 1994, 7). 아세안지역포럼은 동태평양 지역에서 형성된 최초의 제도화된 안보 시스템이며 동시에 1994년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안보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었다. 이밖에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n-Pacific: CSCAP, 동북아시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북태평양안전보장회의, 중·미·일 삼자 학술 연구회 등이 있다.

이러한 비정부 협력안보 시스템은 다자 안보협력을 뒷받침한다(朱鋒, 2007a, 443). 그러나, 협력안보의 이론 역시 개념상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예컨대 “정식 기구의 확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협력안보가 펼치는 모든 안보협력 활동이 엄격한 의미에서 안전기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임시적이고 비 정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제도로서의 안보협력 보장이 취약하다. 이와는 달리 효과적인 안보협력 제도는 오히려 국가의 ‘외부 안보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의 불필요한 군비확충을 억제한다. 개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인 국제환경에 착안하여 자신의 안보와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안보이익과 안보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충돌과 전쟁을 최대한 억제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은 반드시 국가들의 협력을 기초로 한 제도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협력 시스템을 장기간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강대국 협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朱鋒 2007a, 44).



전통적 의미로서의 '강대국 협약'

전통적 의미에서 강대국 협약은 지역 내 강대국 간의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 안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강대국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배타성과 비정식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배타성이란 협약이 강대국 간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약소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들기 어렵다. 반면에 비정식성은 강대국간 정식 제도와 조직의 형성이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강대국 협약의 전제는 강대국들 사이에 근본적인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상황을 유지하여 충돌을 최대한 피한다는 것이다. 강대국 협약의 본질은 하나의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Kupchan & Kupchan 1991, 120). 소위 말하는 집단안보 시스템은 통제가 가능하고 협력을 강조하며 조직적이다. “어떤 국가가 당한 침략은 바로 다른 모든 국가의 침략이다.”라는 공동인식이 전제되므로 우위를 점하는 국가의 반격을 받을 수도 있다(漢斯·摩根素 1995, 375).

‘유럽협조체제’ Concert of Europe는 전통적 의미에서 강대국 협약의 본보기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단어는 1814-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메테르니히 Prince von Metternich가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각국 외무부 장관 대변인이 정기적인 회견을 통해 서로 소식을 교환하는 것이 유럽 협약을 맺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袁明主 2005, 40). 유럽협조체제의 본질은 열강들이 회의를 통한 협상의 방법으로 유럽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다국적·다자적 외교시스템이다. 이러한 협약은 하나의 제도가 되어 근래 100년 동안 세력균형이론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적 관념’ European concept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전 유럽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다. 이외에도 유럽협조체제는 국제조직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협조체제를 통한 강대국간 세력균형 및 집단안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라지기도 했으나 유럽협조체제가 내포하는 ‘유럽적 관념’과 ‘유럽공동체’는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이 미래를 훤히 밝혀주는 등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유럽적 경험’에만 의지한다면 역사 경험주의에만 치중하여 동아시아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말하자면, 구체적 조건과 실제 현실의 차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세력균형과 같은 상황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미국 중심의 동맹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연맹의 대항으로 오늘날 유럽공동체와 같은 ‘안보공동체’ 역시 불투명하다. 경제발달 수준이나 국가제도, 사상,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동아시아는 아직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목표는 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아직은 먼 미래이다(朱鋒 2007a, 157).



강대국 협약과 동아시아 안보협력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공동체’와 같은 협약을 맺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안보협력 시스템의 형성을 위한 강대국 협약은 동아시아 안보 증진을 위한 초석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고유의 역사와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제도화된 협력시스템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안보협력 시스템 형성을 위한 강대국 협약

신자유제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코헨(Robert O. Keohane)에 따르면, 정치 행위자 간의 공동의 이익이 국제기구를 만들어 내며 오늘날 점증하는 상호의존성과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증대로 국제기구의 역할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Keohane 1984, 78).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국제기구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문제와 공동이익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대국 협약과 협력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강대국의 협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지역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조건에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Keohane 1984, 63). 그 중에서 상호협력을 기초로 한 강대국 협약은 지역 협력안보 형성의 필수조건이다. 예컨대, 강대국간 대화가 줄어들고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안보협력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주변 약소국 역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결국 다각적인 안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대국 간의 협약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전 지역 내에서 ‘대화습관’과 ‘협력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지역 협력시스템의 형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만일 강대국간 안보협력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를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앞서 말한 시스템의 형성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협력 시스템이 형성되기만 하면 강대국 협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 간의 협약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강대국 협약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아시아지역 역사

그러나 단순히 이론에만 의지하여 실질적인 상황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 안보협력 문제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시 된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오늘날 이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



고 협력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침략의 역사 이전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 허팡취엔(何芳川)은 과거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화이질서’華夷秩序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동아시아의 주도적인 국가로 성장하였고, 심지어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과거 봉건 왕국의 제약이 있었지만 빛나는 문명을 토대로 진보와 변형을 구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은 오늘날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何芳川·袁明 2007, 252). 중국의 주류는 ‘평화, 우호, 진취’이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중국은 ‘패권주의’나 ‘조공제도’와는 거리가 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편 다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강대국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 외 국가들은 강대국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통일’이나 ‘협력’을 더욱 순조롭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 간의 경제, 문화 교류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국가 간 우호도 증진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구시대의 산물은 자연히 자취를 감추기 마련이다. 그래서 19세기 동아시아가 자본주의에 휩쓸렸을 때 강대국간 협력 부재는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혼란과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더욱 애석한 것은 이 당시 패권 다툼 과정에서 열강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을 ‘득실’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당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중국은 서구 열강들의 패권 다툼에 희생되어야 했다. 이 시기 강대국이 동아시아에 미친 실제 영향력에는 당연히 ‘협약’이 부재했고, 그들은 자신의 세력 확장과 이익에만 급급해 있었기 때문에 ‘일체협력’의 상태에서 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袁明 1996, 21).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냉전의 양극체제에 빠졌고 동아시아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당시의 상흔은 오늘날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대규모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핵 테러에 휩싸인 양극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국가의 강요에 의해 협약을 맺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동아시아 정세 안정의 계기가 되었고 일정 범위 내에서의 이 지역의 협력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냉전시기에는 미국의 ‘패권안정’ 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와 같은 혼란은 없었다. 이와 같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논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은 강대국 협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강대국 협약은 최소한 지역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지역 내 혼란을 방지해준다.



강대국 협약과 동아시아

물론 역사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떠난 역사 공론은 상당히 위험하다. 인간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고,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역사적 경험은 단지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대국 협약은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초석이다.”는 결론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지역의 특성 파악 또한 전제로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현실 상황에 대해 학계에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로버트 로스 Robert S. Ross는 비록 미국이 냉전 종결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극 군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역 세력균형을 통해 강대국 지위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Ross 2004, 51-103). 반대로 아론 프리드버그 Aaron L. Friedberg는 양극 체제 후 세계는 단극체제로도 다자체제로도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서로 인접한 국가들은 빈번한 왕래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동아시아 역시 이러한 지역 다자체제에 속해 있다. 하딩 Harry Harding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현재 ‘다접점’ multinode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경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Friedberg 1993, 5-33). 그렇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의 형세를 어떻게 개괄해야 하는가? 동아시아 지역이 현재 직면한 상황은 기타 지역은 결코 겪어보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다(哈里·哈丁 2007, 95-114). 따라서 이 지역 상황에 대한 특징을 열거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는 반드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극’ polar을 국제관계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세력 분포를 알 수 있다. 단극체제는 세계에 하나의 강대국만이 존재하고, 그 강대국의 세력이 다른 국가를 훨씬 초월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계의 시스템이 단극인지 양극인지 혹은 다극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국제사회의 세력 분포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 볼 때,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는 미국 주도의 단극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방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패권을 가지고 있고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한다. 무기개발을 위한 군비지출, 군사훈련 등 군사방면 역시 세계 1위이다. 정치 방면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의식 혹은 국제사회 조직이나 국제사회 규범 면에서 볼 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미국은 문화 영역에서도 역시 ‘군계일학’ 群鷄一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신문 매체뿐만 아니라 음향과 영상을



비롯한 미디어와 콘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제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중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중국 외교정책이나 국제관계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미국과는 이른바 ‘이해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고, 지역 또는 전 지구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단극체제 역시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행위양식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朱鋒 2007b, 37-38).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고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관계는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과의 협상을 거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예상은 동아시아 내부의 문제이므로 단극체제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비록 동아시아 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동아시아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수성에 관한 고찰이나 지역협력을 위한 노력은 동아시아 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동아시아에는 강대국이 즐비해 있고, 정세가 복잡, 다양하며 한편으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강대국이 즐비해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제일의 강대국 밀집 지역이라는 뜻이다. 연합국 안보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중국·러시아, 그리고 경제 선진국인 미국·일본·중국·한국, 군사면에서 세계 선두에 있는 미국·러시아·일본 등 이들 강대국 간에는 상호 신뢰와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복잡한 형세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 자원, 경제, 과학, 기술, 군사 등의 측면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미국은 경제, 과학 기술, 국방 등의 측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 대국의 위치해 있긴 하나 정치적 영향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은 경제 약소국이기는 하나 군사역량 및 정치적으로 우세하다. 아세안(ASEAN)을 고려할 때 동남아 지역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형세가 다양하다는 것은 동아시아 여러 국가 간 사회제도에서 경제발달 수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많은 국가들은 내부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역사가 남긴 혹은 정치에 의한 영토 및 영해 분쟁, 민족주의 정서 등 각종 요소가 뒤엉켜 있다. 친밀한 관계라 함은 경제, 금융, 환경, 문화 등 방면에서 지역 내 국가 간에 존재하는 의존 및 공동체 의식을 말한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간에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범위 내에서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



과는 무관하게 긴밀한 상호 접촉의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접촉의 기회가 많을수록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또한 더욱 발전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대국은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이익과 공동목표는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기초가 되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상호협력에도 균형을 가져다 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을 거울로 삼아 동아시아는 강대국 협약을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자회담에서의 강대국 연합

지금까지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대한 강대국 협약의 의미를 이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현실 상황에서 강대국 협약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강대국 협약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6자회담Six Party Talks은 현재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형식의 다자 안보협력체제이며 동아시아 협력의 산물이다.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이 강대국 간의 협조 위에 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모든 지역의 안보협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워싱턴, 도쿄, 모스크바와 북경의 입장에 달려 있는 것이고 평양이나 서울의 태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4강(미·일·러·중)이 협의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간단한 논리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신저의 논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郭蘇榮洋 1988, 97). 비록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합하진 않지만 참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강대국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朱鋒 2007a, 346).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미 간의 전략적 정책은 첫 번째 핵심요소이다. 예컨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6자회담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중미 양국은 수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한 단계 성숙한 6자회담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朱鋒 2007a, 339).

그러나 키신저의 주장에도 결점이 존재한다. 본문에서는 강대국 협약이 안보협력의 초석이라고 거듭 반복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협력에 대해 논하자면 강대국 협약의 기초 위에 형성된 안보협력만이 제도화된 시스템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은 ‘광명성 2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발표했다. 4월 13일 연합국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의장 성명을 발표하여 ‘비난’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에게 앞으로 발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록 이와 같은 성명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와 미국의 양보 하에 타협된 것이기는 하나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북한 인민의 자존심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평화적인 위성 활용권을 손상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이튿날 북한은 6자회담에서 물리나 핵실험 설비를 원상복귀시켰다. 같은 해 5월 25일에는 2006년 10월에 이서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것은 6자회담과 전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막대한 타격임에 틀림없으며 제도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은 ‘전략적’으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한 입장은 동아시아 지역의 단결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각 국가가 북핵문제를 주시하여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강대국 협약이 동아시아의 복잡한 조건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강대국 협약은 강권정치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국가 역시 강대국 간의 균형을 통해 전략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강대국은 스스로의 권리를 향유해야 함과 동시에 강대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강대국 협약은 마땅히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 다자 안보협력 및 지역일체화의 ‘진정한 초석’으로서의 강대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어떠한 지역의 행동은 모두 제도적인 권위 형성을 필요로 하는데 제도 권위의 핵심은 제도의 실행 능력에 달려 있다. 만일 6자회담과 동아시아 전 지역의 안보시스템이 이러한 시행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설사 일체화된 협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朱鋒 2007a, 357). 더욱이 북한과 같이 무서울 것이 없는 국가는 스스로의 권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역안보협력시스템의 실현을 저해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에 위협을 줄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처럼, 이론상 혹은 현실 분석에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은 제도화, 구조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현실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대국 협약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고 반드시 현실과 결합하여야만 지역 안보협력시스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아시아 지역에는 미·중·일·러와 같은 강대국이 개입되어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강대국 협약은 미-러, 중-러, 중-미, 일-러, 중-일 등 쌍방의 협약을 중심으로 중-미-러, 중-미-일 삼각관계의 균형이 존재한다. 또한 4개 국가의 4자협약은 비록 각국이 중시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요구한다. 안보협력을 위한 각국의 대화와 안보관념만이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또한 아태지역의 안보는 강대국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丁奎松 2000).
- (2) 전통적인 강대국 협약은 강대국간 동맹관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일동맹의 존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방해요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미일동맹은 냉전 이후의 산물이기도 하나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기타 국가들에게 엄청난 안보압력을 가했으며 신 안보협력시스템 역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강대국 협약을 더욱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전통적인 강대국 협약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애요소를 대담한 태도로 돌파하여 동아시아 강대국 협약의 올바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미일동맹이 장기간 동안 동아시아 안보시스템과 병행, 공존 하는 것을 방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협약과 미국의 안보 이익은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강대국 협약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강대국 간에 상호신임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모두 주지하고 있듯 동아시아 각국 간에는 역사와 현실 상황으로 인해 상호간 신뢰가 견고하지 못하다. 필자는 현재의 안보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반면 역사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해왔던 역사에 관해서는 왜곡의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럽과 같이 역사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하여 현실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흥국가로서 중국은 적극적인 지지자 또는 참여자라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사문제든 현실문제든 상호 신뢰를 형성하여 강대국 협약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朱鋒 2007a, 159).

현재 6자회담이 좌절의 위기에 직면해 있긴 하나 강대국 협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안보협력시스템을 형성해야 할 시점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관련 국가들은 이것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여 안보협력 시스템의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각 국가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협력시스템을 통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이익 균형을 탐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안보협력시스템이 지역 내 모든 국가에서 인정받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charya, Amitav. 2001.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London: Routledge.
- Evans, Gareth. 1994. "Cooperative Security and Interstate Conflict." *Foreign Policy* No. 96.
- Friedberg, Aaron L. 1993/94.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3 Winter.
- Goh, Evelyn and Amitav Acharya. 2005. "The ASEAN Regional Forum : Comparing Chinese and American Positions." Mellissa Gurley ed. *Advancing East Asian Regionalism*, London: Routledge.
- Kang, David C. 2003a.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 . 2003b. "Hierachy Balancing and Empirical Puzzle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3.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isong, Ding. 2004. "East Asia: Evolving Security Concepts, In Yan Xuetong." Zhou Fangyin, ed.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 Kupchan, Charles A. and Clifford A. Kupchan. 1991. "Concerts, Collective Security, and the Future of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1.
- Ross, Robert S. 1999.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23, No.4.
- . 2004. "Bipolarity and Balancing in the Asia." Yan Xuetong & Zhou Fangyin eds.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 Shambaugh, David. 2006. "Introduction." David Shambaugh e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郭苏繁洋. 1988. 《南北韩分裂背景、和谈及展望》. 台北：台湾茂昌图书有限公司.
- 汉斯·摩根索. 1995. 《国际纵横策论：争强权，求和平》，上海：上海译文出版社.
- 请参见袁明. 1996. "21世纪初东北亚大国关系". 《国际问题研究》，1996年 8月，第4期，第21页.
- 丁奎松. 2000. "亚太大国关系对地区安全合作的影响". 《现代国际关系》.



- 安德鲁·汤普森. 2005. "Think Globally, Act Locally", 《国际政治研究》
- 见朱锋. 2005 "变化中的东北亚地区安全". 国际学术研讨会暨. "第一届北京大学东北亚地区安全论坛" 会议综述. 《国际政治研究》
- 袁明主编. 2005. 《国际关系史》.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哈里·哈丁. 2007. "亚太区域的新时代: 从两极到多中心". 见袁明主编. 《跨世纪的挑战: 中国国际关系学科的发展 (修订版) 》.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朱锋. 2007a. 《国际关系理论与东亚安全》,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 2007b. "中国和平崛起: 与单极的关系". 见朱锋、【美】罗伯特·罗斯主编. 《中国崛起: 理论与政策的视角》.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请参见何芳川. 2007. "'华夷秩序'论". 见袁明主编. 《跨世纪的挑战: 中国国际关系学科的发展 (修订版) 》.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约翰·米尔斯海默著, 2008. 王义枢·唐小松译. 《大国政治的悲剧》,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북한문제

김민성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서론

한중관계는 1992년 8월 수교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다.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교역액은 2007년을 기준으로 1천 450억 달러를 기록하며 92년에 비해 무려 22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첫 해 13만 명에 정도에 불과했던 인적 교류는 2007년 약 540만 명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¹⁾ 한중 양국은 활발한 경제적·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에 합의하였으며, 1998년 ‘21세기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와 2000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심화시키면서 발전해 왔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 오랜 역사적 관계 및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중 수교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국의 수교를 통해 한국은 대만과 단교를,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북한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외교적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정상화를 통해 1949년 10월 신중국 성립 이후 4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는 정치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들끼리 수교를 맺음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도 ‘탈냉전의 시대’가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이다(현인택 2005, 109-110).

2008년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실용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한중 관계는 2008년 5월과 8월에 양국에서 가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게 된다.

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



한중 양자관계가 격상함에 있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강화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양국은 기존의 경제·사회·인적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리적으로도 양자 관계를 넘어 한반도-동북아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현안을 다루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양국이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안보적 측면에서 양국 공동의 관심 사항인 북한문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인식차를 보여 왔는데, 한국은 북한을 적대적 상대로, 중국은 우호적 상대로 인식함으로써 관계 설정의 출발점부터가 달랐다. 한중 수교 이후에도 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는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냉전 이후의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안보적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통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변수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 노력이 수사적(rhetoric)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위협 인식차에 따라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일종의 ‘방해 요소’(impeding factor)로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북한문제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은 6자 회담 등 다자협력 노력에 비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 여름과 가을에 일어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그러한 양국 간 인식차를 줄이는 계기가 된다. 양국 모두에게 북한은 직접적(한국)·잠재적(중국) 안보 위협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상대로서 양국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양국 관계가 격상된 현재, 과연 북한은 양국에게 여전히 ‘방해 요소’의 존재로만 남을 것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한중관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여러 분야에서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대답은 ‘아니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북한이라는 존재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 분모’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답이 유지되려면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관계의 발전을 국제관계에서 ‘목표에 따른 국가 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 2008년 현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 격상이 양국의 공동 이해가 맞물려서 얻어진 결과임을 역설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1) 한중관계 격상과 북한 요소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접근을 바탕으로, 2) 양국 ‘전략적 협력’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고 대북한 공동 인식에 대한 연계성을 짚어보며, 3) 그 틀 속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그려봄으로써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08년은 한중관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해이다.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동의 비전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호 간 신뢰 구축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뢰 구축은 특히 양국에게 민감한 사안이자 동시에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북한문제



들에 대해 본격 대화를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공동 인식과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에 대해 상황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북한이라는 변수가 다시금 양국 사이의 장애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중관계의 발전 과정

한중관계의 개관

한국과 중국은 1970년대 말 비공식 접촉 및 간접 교역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스포츠·문화·학술교류 등 비경제 분야로 양자 간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1992년 공식적인 수교를 계기로 2008년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양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동시에 민간 교류도 활발히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계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2년 수교 당시 약 64억 달러이던 양국의 교역액은 96년에는 200억 달러를 기록하며 3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다시 2002년 411.5 억불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4위, 수입대상국 2위를 나타내며 홍콩을 제외할 경우 제3위의 교역상대국으로 기록되었다([표1] 참조).

[표1] 한중 간 교역 현황(2002년~2007년)²⁾

|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 | 2007 |
|------|-----------------|-----------------|-----------------|-----------------|-----------------|-----------------|
| 수 출 | 237.5 (30.6) | 351.1 (47.8) | 497.6 (41.7) | 619.2 (24.4) | 694.6 (12.2) | 819.9 (18.0) |
| 수 입 | 174.0 (30.8) | 219.1 (25.9) | 295.9 (35.0) | 386.5 (30.6) | 485.6 (25.6) | 630.3 (29.8) |
| 무역수지 | 63.5 | 132.0 | 201.8 | 232.7 | 209.0 | 189.6 |
| 총교역액 | 411.5 | 570.2 | 793.5 | 1,005.6 | 1,180.2 | 1,450.1 |

* 단위: 억불, 괄호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참조.



인적 교류 역시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2007년까지 총 20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5월의 이 대통령 방중과 8월 베이징 올림픽 참석기간 중 만남, 그리고 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한 해 동안 무려 세 차례의 정상 간 만남이 있었다. 또한 2007년까지의 집계를 살펴보면,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수교 이후 무려 75차례나 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민간 간 교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중 일본인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고 양국 간의 항공편도 매주 800회 이상 운항되었다. 이처럼, 물리적인 통계만 봐도 다양한 부분에서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엿볼 수 있으며, 이만큼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동반자 partner로서 자리 잡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표2] 한중 간 인적 교류 현황(2002년~2007년 11월)³⁾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1-11 |
|--------|---------------|---------------|---------------|---------------|---------------|---------------|
| 방한 중국인 | 54 (11.9) | 51 (-4.9) | 63 (22.3) | 71 (13.2) | 90 (26.3) | 98 (17.3) |
| 방중 한국인 | 212 (26.5) | 195 (-8.4) | 284 (46.2) | 354 (24.5) | 392 (17.6) | 442 (22.9) |

* 단위: 만명, 괄호는 증가율(%) **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중국국가여유국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의 성장을 포함한 양적인 팽창 외에도 정치·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발전해 왔다. 탈냉전 시대가 개막하면서 한국은 노태우 정부 하의 ‘북방정책’ Nordpolitik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김태호 2003, 61).⁴⁾ 한중 수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하여 “한중 수교가 남북한 당면문제의 해결과 관계 발전,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하며, 양국의 수교가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지역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추진이 중요했다. 같은 시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하여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서방 세계로부터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의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3)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참조.

4)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북방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한국의 대중국관계 추진은 초기부터 남북한관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타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1992년 10월에 열린 제14차 당대회에서 개혁·개방의 심화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매진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러한 배경들로 보아 8월에 이루어진 한중 관계정상화는 중국 내의 정치적·경제적 계획과도 맞물렸던 것으로 판단된다(김태호 2003).⁵⁾ 1992년 수교 당시 한중관계는 ‘선린우호관계’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시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였고 한국은 대북 제재의 입장을 견지하여,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내며 갈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양국 간 교류와 경제적 상호 이해가 맞물려 1998년 양국 관계는 ‘21세기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틀로서 한 단계 더 격상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수교 이후 약 10년 간의 한중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경제적 요인을 더 강조한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통해 남북대화, 북한 개방, 북한 도발 억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초석으로 양국 관계에 접근했다고 이해 할 수 있다(김태호 2003, 61-63).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중국의 후진타오 체제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로 다시 한번 격상시키며 안정적 발전 궤도 진입을 알리게 된다(외교통상부 2007, 66-67).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평화·안정 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온 정치적인 부분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문흥호 2007 48-52). 한국 정부는 당시 동북아 지역 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역시 북한문제의 상황 관리를 통한 한반도 안정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정치·경제·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신국제질서 확립,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세계 차원에서의 전방위 외교 추진 등을 동북아 지역의 전략목표로 삼고 한국 정부와 실질적인 협력 모색을 원했다. 또한, 중국은 북중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주변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문흥호 2005, 88-89).

결과적으로 한중 양자 관계는 수교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경제·통상 부분과 사회·문화 분야는 수치상으로도 획기적인 증가를 보이며 발전해 오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북한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목표 차이, 북중관계 및 한미관계 등과 맞물려 이해관계가 얽혀

5) 아시아 국가들의 수교와 관련하여, 당시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1993년 말까지 무려 27개국과 수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양국 간의 정치체제, 이념적 가치 등이 상이하여 앞서 언급된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양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은 사안별로 꾸준히 국가이익 간의 차이를 좁혀가며 수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협력을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관계의 발전의 새로운 초석을 마련했다면, 2008년 한중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의 격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적극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것임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북한문제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1년간 국익을 중심의 철저한 ‘실용주의’를 기본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통적인 한·미 양국 간의 공고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외교’에 힘썼으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를 격상한 것이다. 한중 양국 정상은 2008년 한 해 동안 무려 3번의 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하였으며 실행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표3] 참조).

[표3] 2008년 한중 정상회담⁶⁾

| 기간 및 장소 | 내 용 |
|----------------------------------|---|
| 5월 27일 북경 이명박 대통령 방중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합의하며 공동성명 발표 |
| 8월 9일 북경 북경 올림픽 기념 이명박 대통령 방중 | 관계 격상 재확인 |
| 8월 25일 서울 후진타오 국가주석 국빈 방한 | 5월 합의한 관계 격상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

이로 인하여 양국의 관계는 수교 이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꾸준히 증대되어온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관계발전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협력 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략적 협력’ 의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의 ‘정상외교’ 참조



양국 관계가 ‘전략적’이란 표현을 이용하며 관계 격상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그동안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한중관계를 외교·안보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핵심은 한중 양자 사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협력의 중점(focal point)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 차원으로 지리적 범위를 넓힘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사안 발생 시에도 전반적인 양국 관계 경색을 방지하고 협력의 틀을 유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관계 격상의 주요 특징으로 ‘사안별 협력 강화’에 의한 ‘협력틀 유지’를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시기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보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 즉,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며 양국 모두 이익 증대 차원에서 별다른 걸림돌 없이 발전되어 왔다.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틀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상황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떠한 상황·사안에도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협력 틀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원론적인 점이 재차 부각된 이유는 사안별 협력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갈등이 협력 틀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즉, 기존의 협력 분야 외에 외교·안보 문제와 같이 양국 간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요소를 염두해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북한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즉, 양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차와 정책 방향의 차이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전반적인 한중 협력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길 바라며, 이에 따라 민감한 사안의 핵심인 북한문제에 있어서 표면적·수사적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관계 격상을 통해 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함께 한중관계와 북한문제와의 연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 정치의 이론적인 접근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와 북한문제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현재 한중 양국 간 합의된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는 것이다. 사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과 북한 요소

세 가지 균형balance의 복합

일반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국가 간 관계를 분류할 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제휴alignment, 동맹alliance,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 등으로 모두 국가들 간의 협조 관계를 설명하는 국제 정치의 용어이다. 협력 수준을 나누어 구분짓는다면, 제휴의 경우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는 안보협력 관계로서 반드시 일정한 의무commitment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둘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이들 중 어느 국가가 분쟁이나 전쟁에 휘말렸을 경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체계a set of mutual expectations인 것이다. 이러한 제휴는 느슨한 형태로 약속하는 협상ententes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전재성 2004, 66).

동맹은 제휴에서 언급한 기대체계를 좀 더 공식화하여 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동맹은 참여국 상호 간의 문제에 관한 일정기간 동안의 협조를 전제로 국제문제, 특히 안보문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능력을 집결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공조체제 하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동맹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의 약속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에 있어 상호 간 원조를 약속하는 행위이다. 다른 협력체제와 달리 명확한 공동의 적common enemy state을 상정하고 있다(전재성 2004, 65).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계’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위협 또는 이해에 대한 인식threat or interest perception을 공유는 하지만, 일정한 의무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 될 수 있다. 다만 일련의 전략적 관계들을 살펴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는 공동의 기반common ground이 공고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의 기반은 공동 위협일수도, 공동 이해가 수렴되는 관계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위협과 이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위와 같이 협력(협조)체제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중 양자 관계의 발전과 북한문제와의 연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균형balance 이론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주로 동맹 이론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고 한중관계가 동맹관계라고 규정되지는 않지만, 국가 간 협조체제라는 국가 행위state behavior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를 설명할 경우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 격상하였고, 북한문제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1) 힘의 균형, 2) 위협균형, 3) 이익균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중관계는 북한문제를 통해 ‘세 가지 균형이 복합적complex으로 나타나는 전략적 관계’라는 이해가 가능하다.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우선, 한중관계 격상의 의미를 힘의 균형 혹은 세력균형의 시각에서 짚어볼 수 있다. 현실주의에서는 각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국제 정치의 패턴은 안보 또는 권력의 추구이며, 이에 따라 국가와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세력균형이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최명해 2009, 39).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에 기초한 왈츠Kenneth Waltz에 의하면, 개별 국가는 국제정치의 무정부 상태로 인해 국가들 간의 세력 배분distribution of power은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가들의 최고 목표가 안보 추구(확보)에 있다면, 국가들은 체제 내의 가장 강력한 국가나 수정주의적 국가에 대해 세력균형을 구사하여 안보위협을 제거하려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언급했다(박홍서 2007, 79). 이와 더불어 왈츠는 국가의 목표가 기존의 체제 내에서의 권력 극대화보다는 자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국가를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을 추구하는 방어적인 존재로도 인식했다.

이러한 특성은 미중관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중국은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속에서 잠재적 안보위협을 느끼며, 대미 세력균형을 통해 단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꾀한다는 것이다(박홍서 2007, 80). 중국은 평화적 부상peaceful rise of China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과 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동시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과 같은 미국을 제외한 지역 다자협력기구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냉전 이후 중국은 경성균형hard-balancing 전략을 구사한 적은 없지만, 국제기구나 외교적 수단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연성균형soft-balancing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Pape 2005, 7-45).

사실 한중관계 격상에 세력균형의 시각을 적용하는 것은 세력 차이 혹은 수준 자체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미·한·중·한·미 관계를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관계의 발전을 중요 외교적 사안으로 강조해 왔으며,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방문지를 미국으로 선택하여 한미 양국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으로 선언함으로써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기존의 동맹관계를 ‘글로벌 동맹’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협력의 범위도 한반도-지역-세계적 차원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렇듯 한미관계가 강화됨에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문제를 포함하여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에 맞추어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전략동맹을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며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이 세계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폄하하는 발언



을 한다(한국일보 2008.5.29; 아시아경제신문 2008.5.29).⁷⁾ 이 발언에 대해 한국 내에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에 치중하여 주변국의 반발을 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강화된 한미관계에 대한 ‘견제’balancing라는 의견도 있었다(동아일보 2008.5.28). 즉, 한미관계의 복원 및 강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강조해 왔던 사안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중국의 염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2008년 시작과 함께 중국은 한중관계 격상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표명하였다. 중국 외교부 지도부는 1월 이명박 당선인의 특사자격으로 방중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한중관계 격상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일환으로 한중 간 차관급 정책대화 개최를 제시했다(아시아경제신문, 2008.2.25).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한중관계가 “새로운 형세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언급하며 한중관계 격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이러한 제스처는 한국의 외교가 미국과 일본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염두해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연합뉴스 2008.2.25).

결국, 세력균형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한반도를 무대로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강화되는 한미관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이 한중관계 격상에 적극적이었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시에 한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강화 필요성, 국내적으로도 한미동맹에 대한 균형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격상에 합의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도 세력균형은 무정부 상태의 주어진 환경 여건과 존재하는 체제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특수한 행태를 설명하지 못한다. 구조적structural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국가들의 속성, 의도, 양국 간 인식, 국내정치적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박홍서 2007, 80). 이에 따라, 한중관계의 격상을 세력균형적 시각에서 이해할 때,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간의 균형’이라는 환경적·구조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다.

7)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중 외교부는 “외교적 결례로서 한국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폄하할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런 시각은 억측이며 근거가 없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라고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

두 번째로, 위협균형의 입장에서 한중관계 격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월트Walt는 국가들이 동맹관계를 맺는 이유를 세력균형을 형성하기 위함보다 외적인 위협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Walt 1987, 2-5; 22-26). 즉,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위협에 대해 맞균형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협의 정도는 인구, 경제, 산업, 군사적 자원 등을 통한 물리적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근접성, 공격능력, 인지된 상대방의 의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최명해 2009, 40). 예를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경우도, 냉전 시대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the Warsaw Pact로부터의 심각한 외적 위협에 대해 국가들 간의 공통의 인식이 없었다면 결코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Waltz, 1993, 75-76).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 격상과 북한문제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해가 가능할까? 이 경우, 위협균형 이론 자체를 적용 하는 것보다 위협균형 이론이 주는 통찰력insight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북한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위협인식에 균형이 맞추게 되었다 보다는 북한의 특정 행위들로 인하여 한중 양국 간 북한에 대해 위협의 정도를 가늠하는 인식의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 가능한 상대로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불안, 미사일 실험, 핵무기 개발 등은 한반도 불안정에 기여하는 요소들로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직접적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이다. 이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탈냉전이 지나 현재까지도 북한은 여전히 안보적으로는 한국에게 위협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북중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혈맹관계’라고 지칭되며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로서 인식·발전되어 왔다. 물론 1961년 중·조조약이 체결된 이후 양국 관계가 항상 순탄하게 유지되어온 것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중국은 가장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이기는 했지만, 냉전 기간 동안 중국과 소련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하여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불안정성 및 갈등이 대두되기도 하였고,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남한이 수교를 맺음으로써 양국 관계가 경색을 맞기도 하였다(최명해 2009, 375-386).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표면적으로 항상 협력적·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심지어 북한이 제1차 핵위기의 중심에 있을 때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화를 통한 협력’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혈맹국’으로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획하였을 때,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한반도 전쟁에 중국이 북중 군사동맹조약에 의거하여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북한에게 미국과의 핵협상에 적극 임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신상진 2005, 94-97).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2000년대 들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에는 중국 국내정치적인 변수를 비롯,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부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 핵심에는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을 더 이상 특별한 관계이자 혈맹이라기보다는 다루기 힘든 존재, 중국에게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는 북한과의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북한을 중국 안보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대(suffer zone)로 보는 전략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과 접경하고 있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친중 정권이 유지되고 중·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 중국 동북부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문제를 통해 중국의 역할이 주변국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며 나아가 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도 중국 내에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나 북한을 형제 국가처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경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신상진 2008, 265-291).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소위 국제파(international school)의 등장으로 북한을 중국의 입장에서 특수한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제 사회의 인식’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권유하는 중국식의 개혁·개방 노선을 거부하였으며, 중국의 반대에도 결국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일부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신상진 2008, 277-279).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붕괴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 북한이 미사일과 핵 실험을 연달아 시행하자 북중관계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이라는 중요 사안을 중국에게 20분 전에야 통보하고,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의 서신을 가지고 방북한 후이량위 부총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핵실험 다음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중국과 북한은 일반 국제관계 규범 하의 정상적 국가 간의 관계일 뿐이다.”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신상진 2008, 273). 이어서 중국은 중국 선양의 미국 총영사관에 있던 탈북자들의 미국행에 동의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⁸⁾

8) 탈북자 조치 관련은 동아일보(2006.7.28),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조치 관련은 조선일보(2006.10.17)



북한이 그야말로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을 고려하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안보위협은 강대국으로부터 온 것만이 아닌, 지역적 동학이 중국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다(최명해 2009, 26-27). 이는 지역 국가의 위협 형성 자체가 중국의 대외 제휴행위를 촉발시키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강대국과의 영향보다 지역 국가의 독립적 영향에 의해 안보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역시 강대국 중심적인 안보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세력 균형론에서 한발 나아가, 위협에 의한 균형을 설명하는 것이다(Chambers 2000, 15-18; 최명해 2009, 26-27).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완전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지는 않을지라도 ‘잠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격상의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즉,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관계 격상(양국의 동맹 혹은 제휴 성립)을 이루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익균형 *balance of interest*

마지막으로 이익균형의 시각을 들 수 있는데, 세력균형 및 위협균형과 더불어 현재 한중관계 격상의 의미를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균형은 (특히)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구조중심적 시각(세력균형) 보다는 각 국가의 국내적·국외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슈웰러Schweller에 의해 제시된 이익균형 이론은 기본 전제가 국가 간의 세력변화에 따라 세력균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개별 국가의 인식 *perception*이나 선호 *preference* 혹은 국내정치적 비용에 따라 세력균형 외의 또 다른 형식의 대외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박홍서 2007, 81). 즉, 국가가 협조체제로서 동맹 혹은 제휴를 선택하는 것이 그와 관련된 비용과 효과의 계산 결과라고 보는 합리주의 *rationalism*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Weitsman 2004, 15-16). 슈웰러는 동맹과 제휴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세력 혹은 위협 불균형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 목표의 양립 가능성이며, 동맹 행위는 외적위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이 아닌 이익 *profits*을 얻기 위해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chweller 1994, 72-107).

이러한 접근에서 바라본다면, 한국과 중국은 북한문제라는 공동의 관심사 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 관계를 맺은 것이다. 한국에게 북한은 언제나 안보위협적 요소로 관리해 나가야 할 대상이며, 한반도 안정 나아가 통일은 제1의 국가 목표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은 국익 추구와 연결되며,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잘 관리함으로써 안보뿐만 아니라 평

참조. 이 외에 2006년 중국의 대북한 조치 관련해서 이태환(2006) 참조.



화와 번영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목표로 당장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통한 역내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한반도에서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남북한 모두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문제에 대한 관리를 한국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중국의 장·단기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2008년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용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용과 북한문제 간의 연계

한중 양국이 5월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 격상 및 주요 사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양국의 인식과 이해가 잘 드러난다. 양국은 관계 격상의 의미 부여와 함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양측은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양측 간의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한, 중국측이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한중 협력이 6자 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부분도 양국 관계의 격상과 북한문제 간의 연계가 한층 깊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⁹⁾

또한 8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으로 발표된 공동성명은 5월에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발표된 공동성명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인적·문화,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양국 간의 사업 분야를 기술하고 있다. 한중관계 발전의 발판이 경제·통상의 교류였던 만큼 총 34개의 협력 사안 중에서 17개가 경제 협력 분야인 것이 특징적이다.

또 하나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정치 및 지역·국제협력의 부분들인데, 한중관계의 격상과 미래 협력 사안들 중에서 표면적으로 북한을 공동의 위협이라고 내세우지는 않지만 북한을 염두해 둔 특징적인 조항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우선 첫 번째로 양국은 정치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양국 외교부 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를 2008년 내에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9)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참조.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전략대화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 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며 다양한 직급과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은 북한만을 염두하거나 반대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환경에서 북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 조항에 북한 역시 해당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를 기술함에 있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첫 번째 항에서 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 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 한다. 한국은 6자회담 내에서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목표를 공동이익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범세계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북한문제를 명시(포함)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공동성명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인권 문제의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이 한국과 함께 ‘국제 인권’에 대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은 중국이나 다른 지역의 인권 보다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함의를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의 자연재해 및 식량난 등으로 인한 대규모 기아 사태 등에 대한 공동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도 파악된다.

또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 범죄, 해적 등에 대한 분야 협력하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에서는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틀이 북한문제를 양국 사안을 넘어 범세계적 차원의 사안으로도 다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반확산·반테러 분야에 양국 간 공동 대응 노력을 약속했다는 부분이 관심을 끌며, 이 역시 한중 양국에게 가장 근거리에서 있고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이 우선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양국 간 관계에서 북한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한중 양국은 북한을 양국 간의 사안을 넘어 지역적·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위협요소로 인식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략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함께 설정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동(action)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결론

한중 양국 관계와 북한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2008년 발표된 ‘한중 전략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북한문제와의 연계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협균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중 양국에게 북한 핵문제와 전반적인 북한문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북한을 ‘위협’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익균형의 입장에서 봐도 양국의 관계 격상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능하다.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관리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을 바탕으로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에게 북한문제는 여러 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인 것이다.

특히 한중 양국이 북한 문제를 격상된 전략적 협력의 틀에서 다루게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익균형의 관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관계라는 용어에서 얘기하듯 북한 문제를 공동 위협의 범위로 인식차를 수렴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공동의 위협을 공동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확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북한문제에 대해 공동 위협으로서 인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넘어 이러한 과정을 이익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즉, 양국 공동의 기회에 대한 반응이 전략적 관계라는 틀을 통해 성립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중 양국에게 북한 문제를 공동으로 다루는 것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양국에게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문제에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은 양국의 외교·안보적 측면에 있어 필요성으로 부각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데 동기 부여로서 작용된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의 필요성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제2차 북한 핵 위기, 2006년 북한의 미사일·핵 실험으로 인하여 대북인식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핵 문제에 대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북한 국내 불안정성의 주변국 파급효과(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양국 모두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특히 미중 양국은 2005년부터 격상된 미중 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중 양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인식변화와 협력 환경이 만들어짐과 함께 핵심 당사국인 한국 역시 북한문제 관리 및 해결을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이론적·현실적 적용의 결과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관계 격상으로 나타난 것이며, 정치·외교·안보적 측면의 양국 간 협



력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은 (우회적인 인상이지만) 정치 및 지역·국제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면, 중요 사안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 관리를 위한 한중 전략적 협력의 과제

한중 협력의 필요성

한중 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있지만, 특히 2003년 제2차 북핵위기와 2006년 북한의 미사일·핵 실험 등으로 북한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의 범위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국내 경제 악화, 식량난 등의 내부 불안정으로 인한 탈북자 증가 문제 등은 한국과 중국에게 직접 영향을 주며 공동 위협의 범주로 그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모두 한중 양국에게 관리해야 할 잠재적 위협이자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동기이며, 결과적으로는 협력적 관리를 통해서 양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두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양국에게 지속적인 장애물 *continuous impediment*로 자리 잡아 왔다.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중 양국 관계는 아주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연달아 시행하자 북중관계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기보다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의 합의일 뿐 구체적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자주 어려움에 봉착한다. 최근에도 2007년에는 BDA 문제, 2008년에는 핵 프로그램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 실패 등으로 북핵 문제는 더딘 진전을 보였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대북인식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한중 양국 간 협력의 공동 기반 강화되었으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여전히 장애물로 안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과 핵심 당사국으로서, 남북한 관계, 중국의 대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함께 양국 간에는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북한의 잠재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반적인 북한문제 *North Korean Question*이다. 북한문제는 경제 악화, 식량난, 그로 인한 대량 기아 사태, 체제 불안정, 탈북자문제 및 급변사태에 이르기까지 북한 관련 '문제시 되는 대부분의 사안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적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대응방안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장



기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식량난이나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북한 사회가 불안해짐에 따라 탈북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이제 북핵 문제에 만 경도되지 않고 북한문제 전반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의 협력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에도 언급되었듯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위협 요소 관리 차원 혹은 공공재(public goods) 창출에 대한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양국의 협력은 위에 언급된 두 가지를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통한 협력이 결과적으로 각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지역 안정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국가 전략상 중요한 부분이며, 이로 인해 협력 필요성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전략적 협력의 과제

한중 양국은 장기적 비전에서 북한문제 전반에 대한 전략적 협력 과제를 설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북핵 문제의 6자회담을 통해 주변국들과도 해결 과정을 함께 진행 중인 것이지만, 지속적인 위협요소인 바 큰 틀 내에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북한문제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의 과제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은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국은 공동의 이해를 설정하는 것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의 이해가 수렴되는 부분은 발전시키고, 편차가 되는 부분은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체적으로 대북 인식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핵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은 전략대화를 통해 양국 입장에 대한 이해를 좁혀 나가고, 공동 인식이 있는 부분(북한 경제의 안정화 및 연착륙(soft-landing) 유도 방안 등)을 ‘공동의 이해’ 부분으로 설정하여 협력 분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하는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의 공동 목표(common objectives)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양국은 공동의 목표로서 ‘한반도 안정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큰 그림을 설정하고, 하부 의제들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부 의제 중에서도 북핵 문제의 해결,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6자 회담의 기본 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핵문제 해결 과정과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연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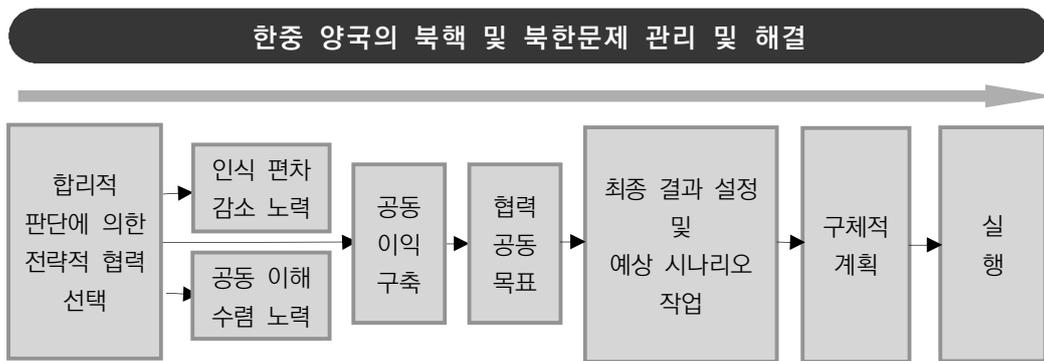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은 북한문제 해결의 이상적 결과(desirable endstate)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은 각각의 임무를 설정·인지하고, 각기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본적인 협력의 구조가 갖춰지게 되면, 협력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림1]은 전략적 협력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양국의 협력 방향이 아래 [그림1]과 같이 반드시 그 순서를 꼭 따라가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 양국 협력의 과정은 사실 상황과 시간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수렴 또는 편차를 보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양상을 띠 수 있으며 공동 이익을 구축하고 협력 목표를 설정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최종 결과 설정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설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양상에 따라서 협력의 범위·방향 등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1] 한중 ‘양국’ 전략적 협력 방향



그러나 양국이 전략적 협력에 합의한 만큼, 대체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구축하고 목표를 세우는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러한 과정을 마지막 단계까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 상황의 설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각각의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각국의 입장을 검토한 후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단·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북한의 미래에 대한 4가지의 시나리오가 유용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1) 현상유지플러스(status quo plus), 2) 현상유지마이너스(status quo minus), 3) 전면적 개혁(serious reform), 4) 변환(transformation)이다. 북한문제 관리 또는 해결의 입장에서 이 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본다면, 현상유지플러스는 말 그대로,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현상유지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주변국에 급박한 위협을 주지는 않는 상황인 것을 가정하면, 한중 양국은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연착륙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상유지마이너스의 경우, 위와 반대



로 지금 현 상황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과 같은 상황 발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다면 당사국 간의 이해 대립으로 핵문제 해결이라는 6자회담 본질에서 방향성이 멀어진다든지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위기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전면적 개혁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북한을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 전략을 모방한다는 가정 하에 대규모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개혁은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경착륙hard-landing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로, 이 상황에서는 북한에서는 정권 변화를 경험하고 심지어 한반도의 (한국의 리더십 하에)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상정하는 경우이다(Goldstein 2006, 137-144). 이 마지막 시나리오는 양국 관계를 넘어 미국 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도 참여하게 얽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양국은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양국은 구체적 협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간별로 구체적 협력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이미 시작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비핵화’라는 부분은 공동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 상태로 보아도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하나의 과정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단기적 해결 어젠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은 식량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북한의 현 상황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부분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부분이자, 실질적으로도 가장 먼저 도움이 필요한 곳일 수 있으며, ‘북한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식량, 의료, 보건, 교육, 식수, 주택개량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BHN를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발전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북한의 행태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그야말로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위기상황 발생이나 전쟁 가능성 등을 포함한 북한 급변사태 및 발생시의 한중 양국 협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양국에게 전략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 격상 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탄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양국 간의 신뢰를 바



탕으로 확실한 목표 의식 아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그 실효성이 클 것이며, ‘또 다른 형태의 수사적 협력’이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한중관계의 미래와 북한

2008년 한국과 중국은 수교 16주년을 맞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양국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나라 사이에서 ‘절박한’ 혹은 ‘결정적’인 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이제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서 괄목할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의 상호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08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관계 격상은 가장 크게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관계 증진에 있어서 북한 변수가 더 이상 장애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은 6자회담에 협력하며 북핵문제 해결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전략대화를 비롯한 국방 협력에도 힘을 쓸 것을 명시하였으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넘어 범세계적 차원에서 국제 인권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한중 양자관계를 비롯하여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모두 다뤄짐으로써, 북한문제 안정적 관리 및 해결에 양국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문제가 더 이상 얘기를 꺼내기 불편한 문제라기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 요소로서 공동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위협 관리를 넘어 장기적 차원에서 양국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략대화나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의와 합의 등을 통해 ‘대화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양국 관계의 협력틀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본으로 철저한 준비와 공동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여전히 불안정한 북한문제는 언제나 다시 한중관계 발전의 골치 아픈 ‘방해 요소’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태호. 2003. “한중관계 11년과 미래: 양적 팽창과 잠재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상〉 가을호: 57-94.
- 김흥규. 2008.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형성과 한중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 6. 12.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로버트 D. 카플란. 2006. “북한 붕괴하면 한반도에는 어떤일이...?”. 〈월간중앙〉 2006년
11월호.
- 문흥호. 2007. “한중관계의 회고와 전망”. 〈국제문제연구〉 겨울: 45-72.
- 박두복. 2005.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7.25.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박홍서. 2007.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 출현?: 9·19 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77-97.
- 신상진. 2005.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 변화와 북중관계: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안보위협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로 인식”. 〈북한〉 4월호: 94-100.
- . 2007.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국가전략〉 제13권 3호: 55-87.
- . 2008a. “중국의 대 북한 인식변화 연구: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65-291.
- . 2008b. “북중관계: 대북지원과 전략적 관계 지속, 사라지지 않는 불신 속에 대북
경제적·외교적 협력과 지원은 지속”. 〈북한〉 1월호: 46-51.
- 이태환. 2006.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북중관계”. 〈정세와 정책〉 9월호. 서울: 세종연구소.
- . 2008. “한중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한중관계 격상에 대해”.
〈세종논평〉 No. 109, 2008.5.30. 서울: 세종연구소.
- 전재성. 2004.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63-94.
- . 2007. “한반도 평화체제: 국제정치이론적 접근”.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특별
심포지움 발표 논문, 2007.10.10.
- 최명해. 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 최훈흠. 2008. “2008년 5월 한중 베이징 정상회담 평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08.8.16. 서울: 통일연구원.
- 한석희. 2006. “6자회담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 〈외교〉 제29호.
- 현인택. 2005.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위하여: 외교안보적 측면”. 〈국제관계연구〉
제10권 제2호: 109-130.

대한민국외교통상부. 2007 《외교백서》. 대한민국정부간행물.



동아일보. 2006.7.28. “中, 북한 길들이기 수순 밟나”.
동아일보. 2008.5.28. “중 외교부,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유물’...그 속내는”.
연합뉴스. 2008.2.25. “이명박 정부 출범: 중 언론, 대중 외교정책에 관심”.
아시아경제신문. 2008.2.25. “한중관계 격상 전망”.
조선일보. 2006.10.17. “중국, ‘당·군부 돈줄 끊어’ 소리없이 북 압박”.
한국일보. 2008.5.29. “중국의 외교무례 파문...한·미동맹 폄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www.fmprc.gov.cn)
미 국무부 홈페이지(www.state.gov)

Bajoria, Jayshree. 2008.6.18.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hambers, Michael R. 2000. "Explaining China's Alliances: Balancing against Regional and Superpower Threats", Ph.D Dissertation in Columbia University.

Deng, Yong. "China and the Six-Party Talks: Strategic Interests behind Crisis Management." *Korea and World Affairs* Vol. XXX, No. 3.

Department of Defense.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http://www.defenselink.mil/qdr/report/Report20060203.pdf>)

Goldstein, Avery. 2006. "Across the Yalu: China's Interests and the Korea Peninsula in a Changing World."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Ross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na's Foreign Policy*.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32-161.

Huang, Jin. 2006. "Pyongyang's Nuclear Ambitious: China must act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http://www.brooking.edu/views/op-ed/fellows/huang_20061013/htm)

Kim, Samuel S. 2006. "China's Conflict-Management Approach to the Nuclear Standoff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 Vol. 30, No.1: 5-38.

Lampton, David M. 2007. "The Faces of Chinese Power." *Foreign Affairs* Vol. 86, No. 1: 115-127.

Lee, Hong Yung. 1994. "China and the two Koreas: New Emerging Triangle." Young Whan Kihl ed.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World*.



- Boulder: Westview Press, pp. 97-110.
- Schweller, Randal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ted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72-107.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1993. "The Emerg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 Weitsman, Patricia A. 2004. "Dangerous Alliances: Proponents of Peace." *Weapons of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Wu, Xinbo. 2000. "Managing the Korean Issue: A Chinese Perspective." *Korea and World Affairs* Vol. 24 No. 1, Spring: 79-91.
- Yi, Xiaoxiong. 1995. "China's Korea Policy: From 'One Korea' to 'Two Korea'." *Asian Affairs* Vol. 22 No. 2, Summer: 119-140.
- Zissis, Carin. 2006.10.24. "China's Relationship with a Nuclear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이 보고서는 EAI와 중국 북경대학교의 국제전략연구센터(國際戰略研究中心;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CIS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Northeast Asian Security Dialogue: NASD)의 결과로 발표한 것입니다.
- NASD의 개최를 비롯한 보고서의 출판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NASD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영환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12) yhshin@eai.or.kr
- 보고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의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이며 EAI와는 무관합니다. EAI는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http://www.eai.or.kr/type_k/public_panellist.asp?code=kor_report&category=25
- 번역: 주민경 편집: 신영환

